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피격 사건, 갑작스러운 후보 변경 등의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이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의 대결로 결정되었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내정이라는 이유로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큰 추이와 결과에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자.

이와 관련해 중국이 누구를 더 선호할까가 먼저 궁금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중국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단과 의지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는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대선에 대한 외부 개입 문제가 이미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제한적 수단도 사용하기 어렵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를 보면 알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느 한 후보를 특별히 선호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해리스를 더 선호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대선을 보는 중국의 시각

중국은 현재 "정쟁은 하지만 충돌은 막는다"는 프레임에 따라 양국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2023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만들어왔다. 지난주 상하이에서 양국의 금융 워킹 그룹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 그 한 사례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했다. 그에 그치지 않고 기술 영역에서 대중제재를 확대했다. NATO 강화, AUKUS 결성, 한미일 군사협력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해리스의 대외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해리스의 당선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이다. 트럼프의 당선을 환영할 수도 없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그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의 10%보다 훨씬 높은 60%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미중 경제의 다-커플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안보 영역에서는 타이완 문제에서 더 급격한 정책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는 타이완 방어를 위해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더 거리를 둘 수 있다. 미국이 타이완과의 관방 교류를 재개한 것도 트럼프의 입기 말이었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미중관계가 전략경쟁에 진입했다는 전제에서 대중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는 미국 대선에서 중국을 비판하던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결국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 두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각각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하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중관계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우리가 주의할 문제는 양국이 전략경쟁하에서 대화와 협력 공간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이다. 이를 활용해 한국의 외교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적어도 초기에는 미중관계가 상당히, 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이 변화가 트럼프의 무역 관련 공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북미관계의 변화 등의 안보 환경 변화와 결합될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한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다.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미중 전략경쟁은 이미 상수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반국가세력 압약"을 운운하는 정부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외교나 안보를 정부의 일로 치부해서 안 되는 이유이다. 외교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지를 격은 조선 중기와 말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 주체적 토론과 참여가 필요하다.

청춘 특특



김유주  
광주대 문예창작과 3년

인간은 AI를 이길 수 없다는 논지의 농담을 들은 적 있다. 기계에 탑재된 AI는 학습한 대로 행동할 뿐인데, 사람은 로봇 강아지에게서 귀여움을 느끼고 영화 속 폐기 처분되는 로봇을 보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AI에게 없는, 인간 고유의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나온다. 감정이나 감수성, 창의력, 상상력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데 AI에게 정말 그것들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오늘날의 AI는 감정을 표현한다. 인간의 영역이라 여겨 왔던 예술 분야에서 활약한 지는 벌써 수 년이 지났다. AI 공모전에 만들어지고, AI를 보조로 활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물론 AI가 감정이나 예술의 영역을 '이해' 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화해, 적절하고 절묘한 결과를 내놓을 뿐이다. 그러나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하는 AI의 결과물은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온전히 스스로 창작의 과정을 거친 AI의

예술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물은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해야 한다는 이들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의 정의 및 범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진이 발명된 후 오랜 논의를 거쳐 사진·영상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근거로 삼는다. AI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창작의 주체를 논한다. 사진이나 AI 같은 기술은 도구일 뿐, 창작하는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예술이 창작자의 내면적 갈등, 성장, 고뇌 등에서 탄생하며, 동시에 그 예술을 통해 독자가 미학적인 감상이나 문제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받아야 한다고 여겨 왔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론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상식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이다. 즉, 창작자는 예술의 주체로, 그를 향유할 수 있던 특정 계층의 독자는 객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복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며 우리가 상실되고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게 되자, 독자들은 대중으로 확산되어 작품을 비판적으로, 어쩌면 비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독자가 주체로 올라선 지금, 예술 분야에 대한 시선은 무척 회의적이다.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건지, 변화하고 있는 건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예술 영역은 독자의 부재를 맞이하고 있다.

주체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인간의 존재를 인식한다. 주체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독자까지 아우르는 말로, 예술이 예술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시점은 창작자와 독자가 예술을 통해 소통 및 상호작용할 때라고 할 수 있다. AI 예술 및 예술가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예술의 핵심을 꿰뚫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즉 현재 예술에 있어 필요한 건, 주체로서의 독자를 다시 예술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창작품들은 이 순간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중이다. 그중 어느 것이 AI를 활용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술을 감상한 독자가 그로부터 어떠한 느낌을 전달받느냐는 감각만큼은 분명하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작품에 모두 감동받지도 않고, AI가 만든 작품에 모두 감흥 없어 하지도 않는다. 예술을 향유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작품이 '예술'이라고 정의내릴 수 없는 것일까.

독자보다 창작자가 많은 시대가 도래했다. 창작자와 독자는 각 개인이 주체로서 존재하고, 인정받고, 인식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를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벤야민이 예술의 평등성을 주장한 지 100년인데 아직도 대중은 예술을 어려워한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독자는 빠져나가고, 창작자들만이 예술가이자 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과거 예술가-독자(주체-객체)의 관계가 전복될지도 모른다고, 재미 삼아 생각해본다.

기고

프랑스인의 시 암송 사랑

기도 했다. 암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동생의 암송을 격려하기 위해 내 만행이 해 주었던 예기된 인상 깊게 다가왔다. "프랑스 뽀빠두 대통령은 만행(萬行)의 시를 외었다더라(시 한 편을 10행으로 본다면 만행은 1000편쯤의 시가 될 것이다)."

짧지 않은 기간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내가 경험한 가장 인상 깊었던 문화충격 중 하나는 프랑스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과정 내내 유일한 숙제로 시 암송을 택한 일이었다.

거기서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과 내가 경험한 일을, 그곳에 유학하면서 딸아이를 키웠던 편지에 작가가 같은 경험을 '한국의 명문(名文)' (월간 조선사·2001)에 소개한 걸 읽고 무척 반가웠다. 긴 글이지만 암송에 관한 흔치 않은 글이어서 독자들들과 공유하고 싶다.

"중학교 과정부터는 물론 대입학력고사에 주과목으로 철학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나라. 사지선다형 시험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 세계문학을 주도하는 찬란한 문학사를 가진 나라.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숨만 선다고 모두 철학자나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프랑스 초등학교에 갔 입학해 불어를 쓸 줄도 모르는 딸애도 일주일애 한 편씩 시를 외어야만 했다. 그것이 유일한 숙제였다. 시 노트엔 선생님이 시를 복사한 걸 노트 왼편에 붙이고, 오른쪽 흰 여백엔 아이가 시의 이미지를 포착해 정성껏 그림을 그려 넣었다.

겨우 만 여섯 살이 넘은 딸애는 노트를 나에게 맡기고 작은 입으로 시를 암송했다. 눈을 감기도 했고 선생님이 감정을 넣어 읽던 걸 흥내를 내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한 시 암송은 5년간의 초등학교 과정 내내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동안 기라성 같은 시인들의 시들이 딸의 입에서 무수히 흘러나왔고, 또 가슴을 적시고 갔다. 위고, 베를렌스, 모리스 카렐, 랭보, 모파상, 발레리, 아폴리네르, 프레베르, 레이몽 그노, 데스 노스...

비유나 표현 자체도 독창적이고 아름답지만 각운(脚韻)을 맞추는 절제된 형식을 통해 더욱더 풍부한 언어 감각을 훈련시키기에는 시 암송이말로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 오는 가을 저녁, 베를렌스의 '가을'이나 아폴리네르의 '미라보 다리' 같은 시를 어린 딸의 입을 통해 듣노라면 감개가 무량해지곤 하였다."

권 작가의 글이 교육당국이나 문화계를 주도하는 인사들을 움직여 우리나라도 시 암송이 중요한 일상의 하나로 자리잡아 갔으면 한다.

시암송국민운동본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2년 안에 좋아하는 시 열 편 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150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분께겐 '외우고 싶은 명시 50편'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다(joywriting@hanmail.net)

社說

초등 학부모 여유출근·단축퇴근제 확대해야

모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방과후 돌봄일 것이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시행한 '1시간 여유출근 및 1시간 조기퇴근제'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주거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시간 퇴근을 늦춰주는 제도이다. 육아 돌봄의 편의성을 높여 아이날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광주시의 취지이다.

육아와 교육에 시달리는 광주지역 학부모들의 송풍을 터주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일명 10시 출근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300인 미만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생 부모 근무자가 1년에 한 자녀당 최대 2개월 간 임금 변동 없이 근로 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애들

밥먹어 학교보내라, 출근 준비하라 정신 없는 학부모들의 아침을 고려해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 10시 출근하거나 출근은 그대로 하되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무제 기틀을 엮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주거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시간 퇴근을 늦춰주는 제도이다. 육아 돌봄의 편의성을 높여 아이날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광주시의 취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했으며, 이후 서울·경기·부산·충북·경남·강원·전남·전북·제주 등이 광주 정책을 배우겠다고 했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출퇴근에 한 시간의 여유를 선물한 제도는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이제 대상 기업 수를 늘리고, 한 가정당 연간 2개월 간 임금 변동 없이 근로 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애들

마약 성분 살빼는 약 오남용 근절 대책 절실

광주지역 일부 병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찾은 광주 일부 병원에서 마약류(항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살빼는 약을 처방받으려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 병원은 비만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등 기본 검사를 생략하고 환자들에게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등을 처방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다이어트 약으로만 알았지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몰랐다. 시기가 부작용을 언급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이 처방받은 약에 펜터민 성분 등이 포함돼 있다는 데 있다. 펜터민은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기능이 있으나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우울증과 불면증, 환청·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해 만 17세 이상, 체질량지수(BMI) 30kg/m<sup>2</sup> 이상인 사람에게 4주 이내, 최대 3개월 동안만 처방·투약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이유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도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을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일부 병원에서 약물 오남용을 막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3개월 이상 장기 처방 받거나 병원을 옮겨다니며 많은 약을 처방받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 마약이 우리 일상을 파고든 상황에서 의료계에 안일한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당국에서는 우선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고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출된 허점을 서둘러 개선·보완하는 등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無等鼓

전국 자치단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2016년 9월 28일)된 이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많이 개최한 행사로 '청렴골든벨'이 꼽힌다. 직원들의 청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OX퀴즈, 단답형, 주관식 문제 등을 푸는 퀴즈 대회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음식물 가액 범위'를 묻는 질문은 출제 빈도가 높은데, 정답인지 헷갈리는 문제라도 공직자에게 선물해 해선 안된다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럼 문제,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안된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다? 없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추석 명절 전날 30만 원짜리 한우세트를 줘도 된다?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

린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 뉴스에 담긴 문구를 조금 바꾼 것들이다. 권익위는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문구만 보면 선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듯한 내용으로 읽힌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선물해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줘도 안된다고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리둥절하지 않겠는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시민단체 신고 이후 116일 끌다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권익위(김건희) 물 가액 범위'를 묻는 질문은 출제 빈도가 높은데, 정답인지 헷갈리는 문제라도 공직자에게 선물해 해선 안된다는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럼 문제,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안된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다? 없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추석 명절 전날 30만 원짜리 한우세트를 줘도 된다?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

뇌물 가이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